

영광, 민주당 수성 여부 관심 …신안, 전 군수 5선 도전 주목

영광군수

장세일, 강한 조직력 내세워 재선 도전
도의원·군의원 등 민주당 후보 4명 출사표
민주 경선에 진보·혁신당 후보 공천 변수



장세일 김한규 김혜영

내년 영광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수성 여부가 관심사다.

영광군은 최근 4번(제 5~8회)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2번이나 배출될 정도로 타 시·군에 견줘 민주당 색채보단 '인물론'이 선거에서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의 협투 끝에 힘겹게 군수를 배출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장세일(61) 현 군수는 41.08%를 얻어 각각 30.72%와 26.56%의 지지를 받은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후보를 상대로 진땀승을 거뒀다.

때문에 내년 선거에서 영광군수 어떤 후보를 지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세일 현 군수는 일찌감치 재선 행보에 나선 상태다.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8개월 가량의 군수직을 수행하게 된 장 군수는 '반쪽짜리' 군수가 아닌 전국 동시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재선 군수'를 바라보고 있다.

7대 영광군의원과 11대 전남도의원을 거쳐 영광군수직에 오르며 차근차근 정치 커리어를 쌓아온 장 군수는 강한 조직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군수 취임 이후 신에너지·재생에너지로 통한 기본소득 시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평가다.

장 군수에서 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먼저 앞선 재보궐선거에서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동권(64) 전 전남도의원이 재도전에 나선다. 이 전 도의원은 3선 도



이근철 이동권 이석하

의원 출신으로 지역 사정에 밝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영광군의회에서는 김한규(57) 군의원이 유일하게 영광군수직에 도전장을 냈다. 의정경험은 적지만 오랜기간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한 점이 눈에 띈다.

정치 신인들도 도전장을 냈다. 김혜영(49)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영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전남도 광광정책자문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관광 전문가로 유일한 여성 후보이기도 하다. 이근철(57) 영광가치포럼 대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에 도전한다.

더불어민주당 외 눈에 띠는 후보로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석패한 이석하(54) 전 진보당 영광군수 후보가 꼽힌다.

이 전 후보는 앞선 선거에서 패배한 후 절차부심 재도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이 내세울 만한 후보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중앙당과 지역 당원들의 집중 지원이 예상된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어떤 후보를 공천하느냐도 내년 영광군수 선거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영광=김정원 기자 kow@kwangju.co.kr

신안군수

박우량, 햇빛·바람연금 정책 등 강점
지방의원·행정관료 등 줄줄이 출사표
민주 경선 후 후보자 행보에 변수 커



고봉기 김문수 김태성

내년 신안군수 선거는 박우량(71) 전 군수의 사실상 5선 성공 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박 전 군수는 민선 4·5기 신안군수를 역임한 뒤 한 차례 휴식 기회를 가진 후 민선 6·7기 또다시 신안군수에 당선됐다.

올해 3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군수직을 잃었지만,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처음 이뤄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오르면서 5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군수는 다선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거부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히지만, 재임 기간 군민들로 하여금 체감할 만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장 박 전 군수가 선보인 '햇빛·바람연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신안군은(햇빛연금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훌륭하지 않느냐'라고 수차례 발언 했을 정도다. 대선 후보가 특정 지역체장을 직접 언급한 점도 있지만, 대통령 취임 후 첫 특사에 박 전 군수를 포함시킨 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박 군수의 5선 도전에 대항해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도 적지 않다. 당장 박 군수와 더불어 민주당 당내 경선에 도전장을 낸 후보만도 5명에 달한다.

김문수(67) 전 남도의원도 제 4~5대 신안군의원 제 11~12대 전남도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광호(62) 전 전남도의원도 출사표를 냈다. 제 6~7대 신안군의원과 전남도의원을 역임한 끝까지 정치인 출신인 정 전 의원은 다양한 정치경험과 지역 사정에 밝은 점을 내세우고 있다.

육군 장성 출신인 김태성(59)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도 당내 경선에 나선다. 김 부대변인은 육군사관학교 44기 출신으로 중앙 정치권과의 강한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영암·무안·신안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을 나섰다가 서산적의 원에게 패한 뒤 고향인 산안에서 외선상당하며 군수 출마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배(62)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오랜 정당당지 경험과 현장 경력을 기반으로 지역세를 넓혀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홍빈(65) 전 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도 신안군 최초의 전남도의회 3선을 지난 인지도와 도정 경험을 강점으로 표심을 다지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고봉기(57) 한국해양항만 대표는 조국혁신당 옷을 입고 출마가 유력하다.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에도 불구하고, 30.81%의 지지를 얻었던 고 대표는 '해양', '행정' 전문가를 자임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행정감사 브리핑

"학생선수 폭력 3년째 증가…피해자 분리·보호 강화해야"

정무창 광주시의원 개편 촉구

광주지역 학생선수 폭력 피해가 3년 연속 늘어나는 동안 교육청의 관리·감독은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는 운동을 접고 가해 지도자는 현장에 복귀하는 모순이 반복되자, 시의회가 매뉴얼 전면 개편과 피해자 분리·보호 강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창(광산구 2선구) 시의원은 10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선수 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대응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생선수 폭력 피해 응답률은 2022년 1.2%, 2023년 1.7%, 2024년 2.4%로 해마다 상승했지만, 징계 완료는 4명에 그쳤고 89명은 조치 불요로 분류됐다.

정 의원은 "지도 방식의 일탈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준하는 범죄가 학교 현장에서 '관행'처럼 방치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고교 지도자 폭행 의혹 사례를 들어 현장의 균열을 짚었다. 학부모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고, 졸업생 진술서에는 도구를 이용한 폭행 정황과 '폭력 트라우마 때문에 운동이 싫어졌다'는



문구까지 담겼지만, 약식기소 처분이 내려진 뒤 해당 지도자는 학교로 복귀했다. 피해 학생은 같은 공간에서 마주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해 결국 운동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피해자는 꿈을 잃고 가해자는 다시 현장에서는 구조를 교육정이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응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

교관보호위원회와 유사하게 학생선수 폭력 대응 역시 사안 초기의 보호조치가 느슨하고, 사후 절차는 형식에 그친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각 분리, 전담 상담·치료 지원, 팀 전력과 무관한 출전 정지 등 실효적 조치가 작동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위축되고 2차 피해가 뒤따른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폭력 발생 건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면 학교가 사건을 축소하려는 유인이 생기므로, "사건 발생 시 얼마나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했는가"를 관리자 평가의 핵심으로 바꿔 협장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전국 최저 수준…실질 대책 필요"

차영수 전남도의원 지적

전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 문제가 지적됐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차영수(민주·강진) 도의원은 지난 7일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가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전남의 농어촌 여건을 고려한 차등 예산을 반영해 도시·농촌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는 최근 6개월 평균 혼원이 정원에 미달하면, 운영비 지급 시 낮은 구간 단가가 적용된다. 지역아동센터 인력의 인건비 또한 법정 종사자 수가 증가하면 월 기준액이 커지는 구조로, 소규모 농어촌 센터가 많은 전남이 상



대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차 의원의 지적이다.

차 의원은 "전남은 농어촌 비중이 높아 인력 유치·유지가 특히 어렵다"며 "호봉제가 도입됐더라도 농어촌 가중치 적용과 저하봉 감액금지 등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적용 범위와 단가가 달라져 내부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또 "도시든 농촌이든 아이를 키우는 일은 같고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장의 사기 저하와 이직을 피하기 어렵다"며 "농어촌 가중치와 처우 개선 항목을 구체화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000만뷰 돌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텀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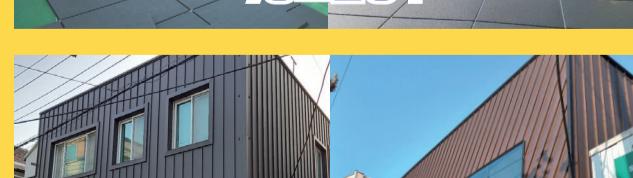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MD MODERN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양동)
공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
T. 062)531-3530, H. 010-9229-3530